

# 인도

##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8. 4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10
IV. 국제신인도 .....	14
V. 종합의견 .....	16

## I. 일반개황

면적	328.7만 km <sup>2</sup>	G D P	2.6조 달러 (2017년)
인구	13.2억 명 (2017년)	1 인 당 GDP	1,983달러 (2017년)
정치체제	의원내각제	통화단위	Rupee (INR)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 및 실용주의	환율(달러당)	65.12 (2017년 평균)

-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,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, 1991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유화 및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.
-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으며,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.
- 2014년 5월 모디정권이 출범한 이후 다양한 개방·개혁정책이 추진되어 부정부패 척결, 인프라 개발, 친기업적인 환경 구축 등 정치·사회적 안정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고 있음.
-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 결성,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,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북쪽 국경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#### □ 2018년 소비지출 등 내수 확대로 경제성장률 7% 중반 수준 회복 전망

- 201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숙련 노동자 부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성장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, 지속적인 경제 개혁 노력 등으로 8.2%를 기록하였음.
- 2016년에는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와 농업 부문 호조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\*에 따른 심리 위축과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7.1%로 둔화됨.

\* 화폐개혁: 2016년 11월 인도 정부가 '지하경제 및 통화위조' 근절을 목표로, 통용되는 주류 화폐인 500루피와 1,000루피 등 고액권 현금에 대해 통용을 금지하고 신권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함. 인도에서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동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부족 현상이 나타남.

- 2017년에는 서비스 부문 호조와 견조한 소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6.7%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소비지출 및 공공인프라 지출 확대 등 내수 확대로 7%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물가안정세 유지

- 2016년에는 화폐개혁에 따른 심리 위축과 식료품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안정목표(2.0%~6.0%) 범위 내인 4.5%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됨.
- 2017년에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둔화, 농업생산량 확대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.6%로 둔화되는 등 안정세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.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,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에 대한 정부보증 최저수매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.0%로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- 인도중앙은행(RBI)은 2015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 도입하여 물가 안정 달성을 우선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을 영위하고 있음.

□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

-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와 낮은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과 더불어, 연료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2016 회계연도에는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지출과 함께 농촌개발과 농민복지에 대한 예산확대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GDP 증가로 GDP 대비 -6.7%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.
- 2017년에는 인프라 개선과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-6.9%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, 인프라 사업 추진, 보조금·복지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ST 시행과 조세개혁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로 전년 대비 하락한 -6.5% 수준의 적자가 전망됨.
- 인도 정부는 2016년 11월 화폐개혁 실시를 통해 비공식경제 축소로 세원 확대, 2017년 7월 상품서비스세 법안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%(2017 회계연도~2020 회계연도)로 제한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 <sup>e</sup>	2018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7.4	8.2	7.1	6.7	7.4
소비자물가상승률	5.8	4.9	4.5	3.6	5.0
재정수지 / GDP	-7.2	-7.0	-6.7	-6.9	-6.5

자료: IMF, EIU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취약한 보건·의료 부문 및 교육 부문 투자 부족

- 세계경제포럼의 2017~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 보건·의료 부문이 취약하여 10만 명 당 결핵 발생건수(116위), AIDS의 사업상 영향(113위), 신생아 천 명당 유아 사망자 수(112위), 결핵의 사업상 영향(109위), 기대수명(104위) 등 전반적으로 보건 부문이 하위권(104위 /137개 국)을 기록하고 있음.
- 2015년 기준 인도(2014년 기준)의 학생-교사 비율은 조사대상 111개국 중 104위로 최하위권이며, 2013년 기준 인도의 GDP 대비 정부의 교육 지출 비중은 조사대상 117개 국 중 84위로 하위권을 기록함.

#### □ 열악한 사업환경 및 낙후된 사회간접자본

-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('17년 10월 발표)에 의하면, 인도의 기업경영여건은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2016년 130위에서 2017년 100위로 상승하였으나 아직은 중하위권을 기록함.
  - 소액투자자 보호(4위), 전기공급(29위), 자금 조달(29위) 등은 양호한 반면, 건축인허가(181위), 법적분쟁해결(164위), 창업(156위), 재산권등록(154위), 수출입절차(146위) 등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.
- 세계경제포럼의 2017~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 인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7개 국 중 66위를 기록하였으며 ICT 사용 비율이 낮은 수준임.
  - 특히, 전력공급의 질(80위), 도로의 질(55위)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.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9년까지 도로, 철도,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4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.
  - 한편, 100명 당 광대역 이동통신 가입자수(124위), 광대역 유선인터넷 가입자수(105위) 등 인터넷 등 ICT 사용 비율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.

□ 과도한 공공채무와 함께 은행부문 자산부실화로 NPL 비율 상승

○ 각종 보조금 정책, 부실 공기업 지원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17년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70.2%(아시아 신흥개도국 평균 44.6%)로 인도네시아(28.9%), 필리핀(37.8%), 태국(41.9%), 말레이시아(54.2%), 베트남(58.2%)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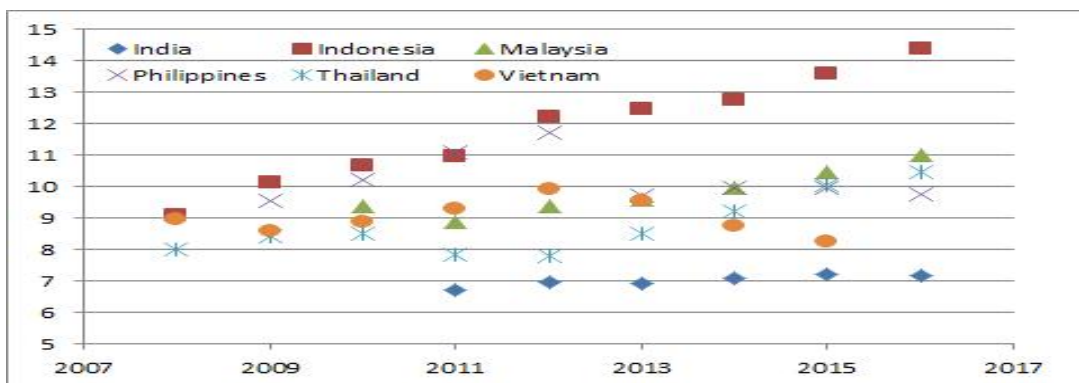
- 2016년 공공채무 이자비용이 재정수입 대비 약 23%를 차지하는 등 외부 충격 대응 등을 위한 재정여력이 크지 않음.

○ 전체 은행업계 예금의 약 74%를 보유하는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NPL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부실화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.

- 국영은행은 2019년까지 GDP의 2% 수준인 450억 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, 인도 정부는 2017년 10월 국영은행 지원을 위해 2년 동안 2.1조 루피(324억 달러)를 투입하는 구제계획을 세움. 한편, 인도의 은행 자본 비율은 2016년 기준 7.2%로 아시아 주요국 대비 저조한 수준임.

\* 인도 NPL 비율(중앙은행(RBI)): 3.23%('13.3월)→3.82%('14.3월)→4.27%('15.3월)→7.48%('16.3월)→9.32%('17.3월)

< 그림 1 > 아시아 주요국 은행 자본 비율<sup>주)</sup> 추이



주: Bank capital to assets ratio(%)

자료: 세계은행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보유

○ 인도는 약 13억 명(세계 2위)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유엔경제사회국(UNDESA)에 의하면 2022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. 2017년 GDP(2.6조 달러, 세계 6위) 대비 민간소비 비중 59%, 내수 비중 101%로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산층 인구 급증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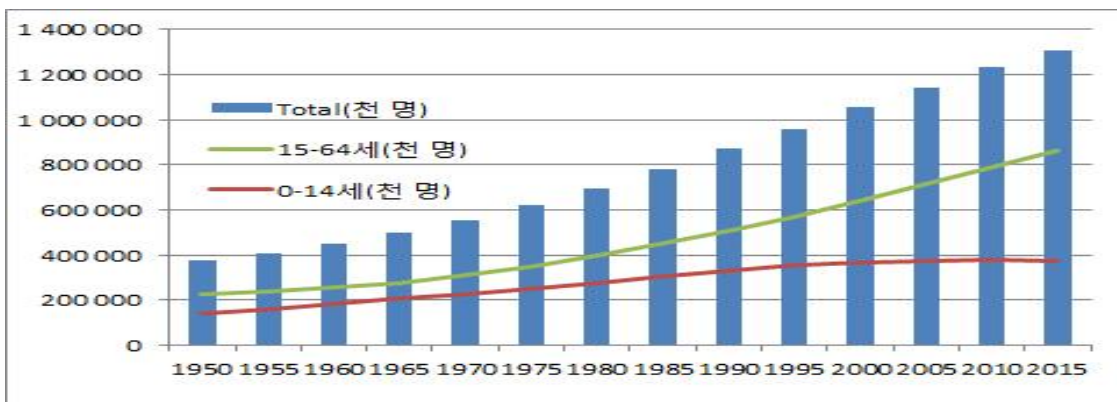
- PwC(2012)에 의하면, 중산층\* 인구가 2010년 1.7억 명에서 2021년 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신흥 중산층\*\* 인구도 4.7억 명에서 5.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\* 중산층: 가계 연소득(INR) 300,000~850,000(달러: 5,614~15,907, 2012년 평균환율 53.44 적용)

\*\* 신흥 중산층: 가계 연소득(INR) 150,000~300,000(달러: 2,807~5,614, 동일환율 53.44 적용)

○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(15~64세)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각각 65.7%, 28.7%이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, 향후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 예상됨.

< 그림 2 > 인도 인구 추이



자료: UN.

□ R&D 투자 등에 따른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높은 ICT 서비스 수출 비중

○ 2016년 R&D 기준 상위 3개 기업의 평균 R&D 지출비를 기준으로 인도는 조사대상 42개 국 중 14위 수준으로 대규모 R&D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.

○ 세계경제포럼의 2017~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, 고등교육 관련 인도는 조사대상 137개 국 중 34위를 기록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.

-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졸업생 중 과학 및 공학 등 졸업자 비율이 조사 대상 102개 국 중 10위를 기록하는 등 과학 및 공학 발전에 강점이 있음.
-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과는 달리 무역에서 통신기기·컴퓨터·정보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일랜드·이스라엘과 함께 높은 수준임.

#### 다. 정책성과

##### □ 정부-중앙은행 간 정책공조로 물가안정 달성

- 2015년 3월 인도 재무부와 인도중앙은행(RBI)은 물가 목표\*를 공식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물가 안정, 재정건전성 확보, 경기 부양 등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함.

\* '16.1월까지 6% 이하, '17.3월까지 5% 이하, 그 이후는 4(±2)%를 유지하기로 합의

- 이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시기적절한 금리인하\*를 통해 경기부양에 일조함.

\* '14년 말 8.0%였던 기준금리를 '15년 1월, 3월, 6월, 9월 네 차례에 걸쳐 1.25%p 인하한 이후 2016년에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0.5%p 인하하고 2017년 8월에 0.25%p 인하하여 6.0%로 유지

##### □ 모디노믹스 추진 등 경제개혁

- 2014년 12월 모디 정권은 10대 국정과제\*를 선정하고 개혁·개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음.

\* 정부 신뢰구축, 창의적 의사결정, 보건·교육·수자원 개선, 정부 투명성 강화, 부처간 협력 강화, 국민에 기초한 정부, 경제살리기, 인프라·투자 개혁, 정책 시행의 시의성 확보, 정책의 안정성 확보 등

- 'Make in India'\* 등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축, 초고속 열차 건설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친시장 정책이 시행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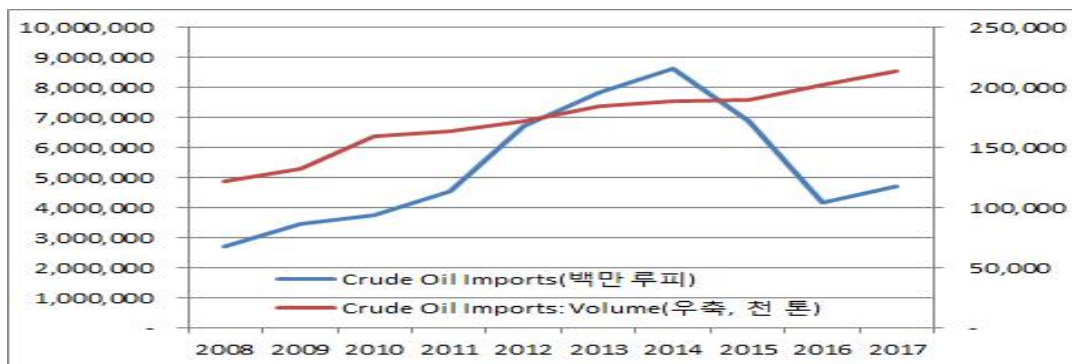
- \* 자동차, 생명공학, 건설, 방위산업 등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'22년까지 25%로 확대할 계획
- 다만, 정치적으로 민감한 노동법 및 토지법 개정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-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중심을 복지제도 설계·효율성 개선과 함께 동제도의 범위 확대 등으로 바꾸고, 총선 후에 재정 보강, FDI 규제 완화, 세법 간소화, 기업경영여건 개선 등 경제개혁을 재강조할 전망이다.
- 인도 정부는 생체인증 데이터기반 신분증번호인 'Aadhar'를 통해 복지자금 지급을 해당 은행 계좌로 연동해 옴.

### 3. 대외거래

#### □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다시 확대

-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2,0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1,07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등으로 1,446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-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소비국으로,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 원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금액은 회계년도 기준 2014년 8.6조 루피에서 2016년 4.2조 루피로 급감하였으나 2017년에는 4.7조 루피로 증가함.

< 그림 3 > 인도 원유 수입 및 수입량 추이



자료: 인도 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

-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
-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878억 달러에서 2016년 153억 달러로 축소됨. 2017년에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51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
-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12년 -4.8%로 확대된 이후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-0.7%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 의해 -2.0%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.

#### □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

-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 확대\*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6년 3,411억 달러(세계 9위), 2017년 3,894억 달러를 기록함.

\* FDI 유입(억 달러): 282('13년)→346('14년)→441('15년)→445('16년)→470('17년)

-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3년 5.6개월에서 2016년 8.0개월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편임.

#### □ GDP 대비 총수출 비율 낮은 수준

- 총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정제 제품 등 수출 감소 등으로 2015년에는 감소함. 2016년 총수출은 0.6% 증가한 이후 2017년에는 13.7%의 증가율을 기록함.

-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은 GDP 증가 등으로 2013년 25.1%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19.7%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낮은 편임.

#### □ 정부의 외채관리와 대규모 외환보유액 보유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양호

-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%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 비중은 2017년 약 80%로 외채구조가 양호함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은 2016년 15.2%에서 2017년 10.5%로 하락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총수출 증가에 따라 2016년 102.3%에서 2017년 94.0%로 하락하는 등 양호한 편임.
- 2016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4.6%로 양호한 수준이며, 2017년에도 24.8%로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단기 유동성 관련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< 표 2 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4	2015	2016	2017 <sup>e</sup>	2018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26,800	-22,086	-15,300	-51,214	-66,642
경 상 수 지 / G D P	-1.3	-1.1	-0.7	-2.0	-2.3
상 품 수 지	-144,046	-136,885	-107,475	-144,639	-171,864
수 출	328,387	272,353	268,615	297,724	331,086
수 입	472,433	409,238	376,090	442,363	502,951
외 환 보 유 액	303,455	334,311	341,145	389,350	..
총 외 채 잔 액	457,552	478,875	456,140	475,437	479,166
총 외 채 잔액 / GDP	22.5	22.9	20.2	18.7	18.1
D S R	16.2	9.7	15.2	10.5	11.1

자료: IMF, EIU, OECD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##### □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 정권 유지

- 2014년 5월 실시된 제16대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(BJP)이 하원의석의 과반의석 이상(282석/총 543석)을 차지하여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30년만에 단독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.

- 중도 우파 성향의 모디 정권 출범 후 관료주의 타파, 인프라 개발, 기업 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음.

- 2015년 8%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, 2016~17년에도 7%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인도국민당은 주의회 선거에서 연승하는 등 2019년 총선 승리 전망

- 여당이 주도하는 전국민주연합(National Democratic Alliance)의 상원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는 못하는 등 열세로 인해 모디 정권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에 표류 중임.

- 모디 정권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, 통합 부가가치세(Goods and Services Tax: GST) 도입을 추진하였으나, GST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개정안은 상원 내 여당의 열세로 인해 상원 통과에 실패함.

- 인도 상원의원 245명 중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33명은 2년마다 전체의 1/3씩 주의회의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므로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됨.

\* 주요 정당 상원 의석수(2018년 4월 현재): 68석(인도국민당), 51석(인도국민회의)

- 인도국민당 주도의 전국민주연합(National Democratic Alliance)은 2019년 5월 하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어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
- 인도국민당은 2018년 3월 트리푸라 주 등 동북지방 3개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2019년 하원 총선에서 승리가능성을 높임.

## 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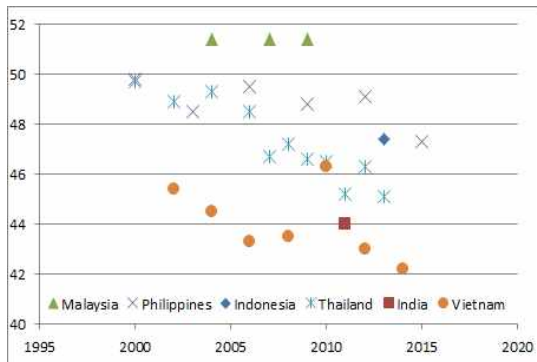
□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불안 요소 상존

- 1947년 카스트 제도가 공식 철폐되었으나 인도인의 생활 저변에 여전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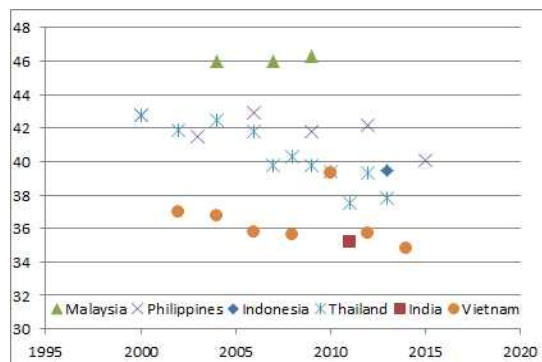
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최하층카스트 우대정책 등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카스트 간 갈등사태가 유발되고 있음.

- 2016년 2월 인도 하리아나 주에서 중간층 카스트에 속하는 '자트'들이 공무원 선발, 대학 입학 등에 부여한 '하층 카스트 우선할당제' 관련 자신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하층 카스트로 분류해 달라며 폭력 시위를 일으킴.
  - 2018년 4월 '특정카스트(Scheduled Castes) 보호법' 완화에 반발하는 최하층카스트의 전국적인 시위로 경찰과 충돌하여 11명이 사망함.
- 민주주의 의식,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- 소득 상위 20%의 소득 비중과 지니 지수 등 소득 격차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됨.

<그림 4> 아시아 주요국 소득상위 20%의 소득 비중



<그림 5> 아시아 주요국 지니 지수(Gini Index) 추이



자료: 세계은행

□ 공산 반군 및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간헐적 폭력사태 발생

- 인도 차티스가르 주 등 중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도 공산반군 (Naxalite)\*의 폭력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함. 정부의 진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산반군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인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정부의 반군 근절이 어려움.

\*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을 추종하고 농민중심의 혁명을 추구하며 차티스가르와 오디샤 주 등에서 약 6,500~9,50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됨.

- 2017년 4월 중부 차티스가르 주에서 공산반군은 연방경찰(CRPF) 소속 경찰관 25명을 소총으로 사살한 바 있음.
- 인도에서 공산반군의 활동으로 2017년 797명이 사망하는 등 2005~2017년 중 민간인과 경찰, 반군 등 8,1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.
- 2015년 6월 동북부 마니푸르 주에서 분리주의 반군이 정부군 20명을 살해하는 등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의 폭력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함.
- 2016년 11월 나가(Naga)족 시위대가 마니푸르 주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한 이후 12월 마니푸르 주에서 폭동이 발생해 차량 22대가 불타고 통행금지령이 선포됨.

### 3. 국제관계

#### □ 실용주의 대외관계 노선 추구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

- 성장잠재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 영향력 확대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위해 모든 국가와 긴밀한 균형 관계를 유지함.
-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 결성을 주도한 이후, 남아시아 지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긴밀한 정치·경제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 2015년 12월,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며 경쟁국인 독일, 일본, 브라질 정상과 4개국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력 강화에 적극 노력함.
-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, 일본, 호주, 베트남 등 아세안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- 중국과는 2014년 9월 정상회담 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12개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경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국경지역\*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 긴장관계를 지속함.

- 인도는 스리랑카, 네팔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나 중국의 투자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으로 투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\* 서북부 잠무-카슈미르 주,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등 총 4,000km에 이르는 지역

□ **파키스탄과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**

- 2015년 12월 인도-파키스탄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으나, 파키스탄과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등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2016년 9월 카슈미르 지역 인도군 기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8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이후 인도·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재연되며 국경지역 교전 위험이 증가함.
- 2017년 12월 카슈미르 지역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인도군 기지를 급습하면서 총격전으로 7명이 사망하는 등 2017년에 잠무·카슈미르 지역에서 300명 이상이 사망함.

**IV. 국제신인도**

**1. 외채상환태도**

□ **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승인금액 대비 0.2% 수준**

- 2017년 말 기준 인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승인액은 345.9억 달러(단기 53.6억 달러, 중장기 292.3억 달러)이며, 연체금액은 중장기 승인액에 대해 67.2백만 달러(중장기 승인액의 0.23%)로 미미한 수준임.

\* 중장기승인액에 대한 연체금액(백만 달러): 101.0('13년 말)→60.7('14년 말)→70.8('15년 말)  
→55.7('16년 말)→67.2('17년 말)

**2. 국제시장평가**

□ **주요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적격 등급 유지**

- OECD는 인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, S&P, Moody's, Fitch는 각각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Fitch가 2013년 6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S&P도 2014년 9월 등급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함.
- Moody's는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개혁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여 2017년 11월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함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B2 (2018. 4.)	B2 (2017. 3.)
OECD	3등급 (2017. 6.)	3등급 (2016. 6.)
Moody's	Baa2 (2017.11.)	Baa3 (2016.11.)
Fitch	BBB- (2017. 5.)	BBB- (2016. 7.)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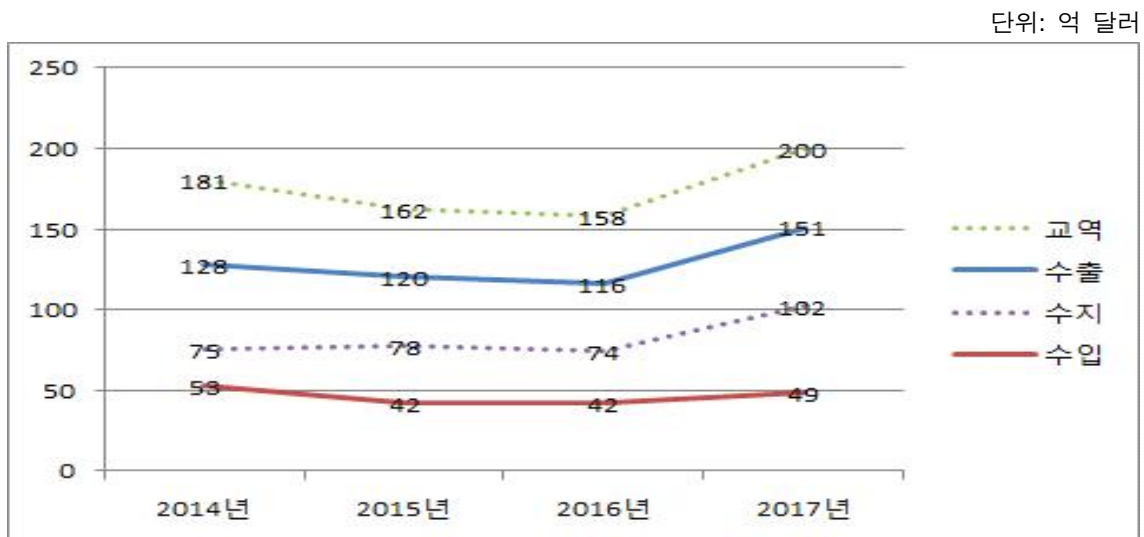
- 국교 수립: 1973년 12월 10일 (북한과도 1973년 12월 10일)
- 주요 협정: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('74년), 과학기술협력협정('76년, '06년 개정), 이중과세방지협약('86년, '16년 개정), 투자보장협정('96년), 세관협력협정('06년),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'10년),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('14년)
- 한국의 제18위 FDI 대상국으로 2017년 투자금액·신규 법인수 증가
  - 우리나라의 인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자동차, 1차 금속, 식료품, 기계장비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. 투자금액은 2017년 12월 말 누계 기준 49.0억 달러(법인 수 977건)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제18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임.
  - 2017년 인도에 대한 투자금액은 자동차, 식료품 등 제조업 위주로 5.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% 증가하였으며 신규 법인수도 112건으로 전년 대비 100% 증가함.



□ 한국의 제11위 교역 대상국으로 2017년 교역은 CEPA 발효 후 수준 회복

- 인도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7위 수출대상국, 제24위 수입대상국임. 2010년 1월 한-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이 발효되어 교역규모가 2009년 121억 달러에서 2011년 206억 달러로 증가함.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양국간 교역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200억 달러로 CEPA 발표 후인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됨.
- 무역수지 흑자도 2015년 78억 달러에서 2016년 74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17년에는 10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.
- 상품 양허, 서비스 추가 자유화 등을 위한 한·인도 CEPA 개선협상이 각각 2016년 10월(서울), 2017년 2월(뉴델리), 9월(서울), 12월(뉴델리)에 개최되는 등 양국간 CEPA 개선협상이 진행되고 있음.
-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, 무선통신기기, 패션잡화(주얼리), 합성수지, 자동차부품 등이며,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(나프타 등), 알루미늄, 합금철, 정밀화학원료, 의약품 등임.

<그림 6> 한·인도 교역 규모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V. 종합의견

-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는 서비스부문 호조와 견조한 소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6.7%로 전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소비지출 및 공공 인프라 지출 확대 등 내수 확대에 7%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.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경제성장률 둔화, 농업생산량 확대 등으로 3.6%로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냄. 인프라 개선과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-6.9%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.
- 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 등 수입액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 의해 2017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,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-0.7%에서 -2.0%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- 친기업 성향의 모디 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. 인도 상원 내 여당의 열세 등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, 주의회 선거 연승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- 만성적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, GDP 대비 70% 수준의 정부채무(아시아 신흥개도국 평균 44.6%)는 우려되나, GDP 대비 20% 내외의 낮은 외채비율, 단기외채 대비 4배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.

선임조사역 김찬수 (☎02-6255-5704)  
E-mail: avik@koreaexim.go.kr